

#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 영 자(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 · 최 정 신(보훈교육연구원 객원연구원)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전몰·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갑작스러운 생계주체의 사망으로 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사별에 대한 슬픔을 극복하고 원활하게 조기 현실복귀를 돕기 위한 상담프로그램의 개발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정부정책자료와 가족상담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와 가족상담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상담센터의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와 현장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전몰·순직군경의 유족은 총 106,066명(보훈연감 2009)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최초보상금 지원을 제외하면 저소득자에 한해 보훈급여금의 지급, 자녀들의 수업료 감면 및 취업지원, 보훈병원진료시 감면혜택 등이 있으나 매우 형식적인 지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다양한 위기상황에 직면하는 유가족들에게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사별가족상담→위기극복(자긍심고취)→사회복귀 및 유지」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프로그램이 절실하다. 둘째, 현장조사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위기가족에 대한 상담은 정부(건강가정지원센터)와 민간(한국가족상담센터, 지역사회(NGO-열린가족상담센터)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느 쪽에서도 사별가족 혹은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드물었다. 특히, 사별가족상담의 경우도 일부 병원의 호스피스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위한 서비스시스템에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 Peer counseling(동료상담)의 필요성이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가족이라는 공통성과 매우 한정된 범위의 특수한 대상자들임을 감안하면 동료상담은 특히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② 자조모임을 통한 가족치료의 필요성이다. ‘임무 중의 순직’이라고 하는 사실은 배우자를 잃고 극심한 상실감으로 삶의 의욕을 잃은 유족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각인시켜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상황에 놓여진 유족들이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자조모임이 필요하다. ③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전문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지역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시점에서부터 근접거리에 있는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특히 신혼부부단계에서 노년기 단계까지 가족생활주기를 구분한 두발(Duvall)의 가족생활주기 8단계를 기준으로 유가족의 속성별 특징(① 유가족 중 부모나 배우자 대상 프로그램, ② 배우자만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③ 유가족의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④ 유가족 구성원 공동 참여프로그램)을 고려한 상담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유가족들은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조기 현실복귀 및 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의 상담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수요와 공급을 윈스톱으로 연계할 수 있는 보훈상담사(가칭)제도의 도입 등 환경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